



제 311 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4. .

**도 시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이진환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속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다.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 제한을 규정함. (안 제4조~제5조)
- 라. 도로부속물 신고 및 처리를 규정함. (안 제6조)
- 마. 포상금 지급방법 및 비밀보장을 규정함. (안 제7조~제8조)
- 바. 포상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를 규정함. (안 제9조~제10조)
- 사. 대상의 비치의무를 규정함. (안 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불임1
- 나. 예산조치 : 불임2
- 다. 관련부서 : 도로관리과
- 라. 입법예고 : 2025. 4. 4. ~ 4. 10. (6일간).
-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로부속물의 손괴자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도로의 부속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전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포상금 지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손괴신고 및 처리와 포상금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시설물의 훼손에 따른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손괴자 파악에 따른 도로부속물 복구비용 원인자 부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 참고자료 >

도로시설물 파손 현황

(단위 : 건, 기간 : 2024.1.1. ~ 현재까지)

항목	건수
계	76
가드레일	6
무단횡단금지대	49
반사경	1
블라드	8
인도웬스	15
차선규제봉	3
충격흡수시설	1
표지판	2

사고자 원상복구 건수 : 21건

2024년 도로시설물 보수 현황

도로시설물	개당 개략보수비	비고
반사경	430,000원	철거후 설치비
차선규제봉	80,000원	
블라드	270,000원	철거후 설치비
무단횡단금지대	450,000원	
무단횡단금지대 가로bar	90,000원	
보차도 웬스	600,000원	철거후 설치비
도로표지판(갈매기,과속방지턱 표지판 등)	80,000원	
방음판 교체	400,000원	
추격흡수탱크	400,000원	
충격흡수시설	5,500,000원	CC1-3,500,000원/CC2-5,500,000원)
가드레일	400,000원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道)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市)나 군(郡)에 보조할 수 있다.
- ④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유발한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람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경기도 도로 등 손괴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도로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나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괴원인자”란 「경기도 도로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손상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2. “도로파손”이란 교통사고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파손으로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파손을 말한다.
3. “도로 등”이란 조례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도로, 도로시설물,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4. “경기도 도로 모니터링단 시스템”(이하 “모니터링단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택시 카드결제 단말기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말한다.
5. “모니터링단원”이란 모니터링단 시스템을 통하여 도로파손을 신고하도록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규격위반신고자”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안전시설의 규격 위반 사항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5만원 이하의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손괴원인자 또는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2. 도로파손을 신고 한 모니터링단원
 3. 도로부속물 중 도로안전시설의 규격위반을 신고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며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손괴원인자 본인이 신고한 경우
2.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3. 신고된 도로 등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손괴·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5. 신고한 사람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
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신고포상금의 개인별 연지급액(제3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다수의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그 분할하여 지급 받은 개인별 금액의 연간합계 금액을 말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호의 경우 연지급액 한도의 4분의 1을 분기별 지급액의 한도로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제한 없음
2. 제3조제1항제2호: 200,000원
3. 제3조제1항제3호: 100,000원

제5조(신고 등의 처리) ①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본부장이,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건설국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콜센터는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손괴원인자, 규격위반신고자 및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경우 신고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도로파손에 대한 신고를 통보 받은 후 지체 없이 도로를 보수하여야 한다.
- ⑤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도로보수가 완료된 경우 신고를 통보받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완료 사실 또는 미완료인 경우는 보수계획을 모니터링단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사

실이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신고가 접수된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분기별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 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손괴원인자 및 도로파손 신고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 처리부서의 담당공무원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 및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도로법」

제2조제2호(도로의 부속물 정의)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91조제1항 및 제2항(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7조(포상금 지급)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액 5만원을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신고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2. 미 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비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 첨부 사유

본 조례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2023년 사고에 의한 도로시설물 파손 61건, 2024년 76건이며 그중 약 30퍼센트는 손괴자 자진신고 및 원상복구하여 실 포상금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도로관리과장 代 도로관리1팀장 김구